

2022년 9월 6일, '학문의 자유' 장례일 : 학문의 자유와 연구 부정

김귀옥/한성대

1. 머리말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기독교 구약 『전도서』 제1장 제9절의 유명한 구절이다. 이 말을 둘러싼 많은 해석이 있다. 비록 신학자나 신앙자는 아니지만, 선의로 이 말을 해석하면 조물주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으니 그 창조물의 하나인 인간은 스스로 겸손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이 말이 웬걸 학문이나 예술, 표현물의 표절과 부정을 합리화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한다(『고대신문』 2005. 4. 4). 최근 김건희여사(약칭 김여사)의 박사학위논문의 표절 문제를 놓고 ‘그 정도는 흔한 일’(『뉴스토마토』 2022. 8. 17)이라 말하던 신평 변호사의 의식 저변에도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니, 표절쯤이야 흔한 일이라는 생각이 깔린 것이 아닐까 싶다.

2022년 9월 6일, 그날은 학문의 자유 장례일이 되고 말았다. 수많은 교수연구자들이 자리와 인생을 걸고 수호하기 위해 신명을 바쳐 왔던 학문의 자유가 난도질당한 날이다. 당일, 14개 교수연구자 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행한 김여사의 1편의 박사학위논문과 3편의 학술연구논문은 표절 등의 연구부정 종합세트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40%가 넘는 표절논문이 정식 심사를 통과한 것이 비정상적”(범학계 국민검증단, 2022)일 수 밖에 없는 일이 21세기 대학과 학회에서 일어났다. 실로 학문이 권력과 영리 앞에 난도질 당했음을 명백히 알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례 없는 희대의 김여사 연구부정행위는 한국 학계가 어렵게 지켜온 학문의 자유에 치명적 상채기를 냈지만, 한국 학계에는 그러한 연구부정행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독재정부 하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통해 세상의 진실을 얘기하고 독재의 탄압상, 왜곡상을 비판하며 고통받은 사회 기층과 소통하며 연대하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문의 자유 수호를 위한 투쟁의 역사도 있었다. 이번 글에서는 학문의 자유 문제를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연구부정행위의 문제를 돌아보고자 한다.

2. 외로운 한국 학계의 학문의 자유 수호 투쟁

희대의 김여사 연구부정사건을 흔한 일로 말하며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려 했던 신평 같은 법조인이라 해도, 최소한 법조인이라면 사상과 학문의 자유라는 말을 알 것이다. 주지하듯 ‘학문의 자유’는 근대인권으로서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이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를 구체화시킨 하위 법률은 없다. 헌법학자들은 학문의 자유에 대하여 여러 나라의 법률에 비추어 해석을 내놓아 왔다. 헌법학자 권녕성은 학문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 (ㄱ) 연구의 자유: 연구라 함은 사색, 독서, 조사, 실험 등에 의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행위를 보장하는 자유
- (ㄴ) 연구결과발표의 자유: 연구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는 자유. 대학의 강의실 이외의 집회에서 발

표하거나 학술지, 또는 저서로써 발표하는 경우.

(ㄷ) 강의의 자유: 연구의 자유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한국과학원 등)에 종사하는 교육자가 자유로이 교수하거나 강의하는 자유.

(ㄹ)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을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발표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단체를 결정하는 자유(권영성, 1999: 362-363).

권영성의 해석에 따르면 연구로부터 발표, 강의,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괄하는 ‘학문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와 직결되어 있다. 프랑스인권선언(1789년) 제11조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사람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그런 까닭에 각 시민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저술하고 출판할 수 있다. 단 법이 정한 경우에 있어서 이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왜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은 사상의 자유, 표현, 저술, 출판의 자유를 각인해 두었을까? 또한 ‘자유’의 남용에 대한 책임이라는 한계의 문턱을 설정해 둔 것일까? 프랑스혁명 당시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은 한편에서는 근대과학기술에 힘입어 자본주의경제체제를 확대시키며 자본의 권력을 키워가고 있었으나 여전히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는 기독교(구교)의 짙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현재는 보편적 진리로 여겨지고 있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종의 기원』은 기독교의 ‘창조론’에 막혀, 『종의 기원』이 발표된 지 150년이 지나 20세기 중엽에야 강력한 패러다임이 되었다. 만일 찰스 다윈이 프랑스혁명 전에 진화론을 주장했다면 그도 기독교적 진리를 부인하는 기독교 권력의 적으로 간주되어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종교재판에 회부되었을 수도 있다. 갈릴레이는 교황측과 타협하여 살아났지만, 실제로 종교재판에 회부되었던 이탈리아 출신 철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조르다노 부르노(Giordano Bruno, 1548~1600)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주장하며,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학이 백성을 우매화시키고 억압하는 통치의 수단으로 된 것을 비판하며 모든 인간의 활동은 존엄하며 모든 종교(?)의 평화 공존을 주장했다. 결국 로마 교황청 감옥에서 7년간 시달림을 받았고, 교황 클레멘스 8세의 명령에 따라 화형에 처해졌다. 오랜 시간이 흘러 1899년 빅토르 위고, 입센, 바쿠닌 등이 추진하여 부르노가 화형에 처해졌던 로마의 캄포 데 피오리 광장에 그의 동상이 세워지게 되었다(김홍식, 2007). 학문의 자유가 근대인권으로 인정받는데에는 이러한 처절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한국에도 학문의 자유 투쟁이 있었다. 조선 후기 실학사상가로서 계보를 잇는 정약전이나 정약용 형제가 연루되어 우리에게 더욱 익숙한 신유박해(1801년, 순조1년 발생) 사건을 현대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중화사상과 성리학의 세계관, 당대의 신분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던 학문과 사상의 자유 탄압으로 볼 수 있다. 당대 실학사상은 학문적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는 없었으나, 대안 사상과 정책으로서 계승되었다.

한편 학문의 자유와 한 쌍으로 존재해왔던 교수정년보장제도는 미국의 테뉴어(Tenure)제도에서 왔다.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 Tenure(종신교수직, 한국식 정년보장제) 제도가 논의되었던 것은 스탠포드 대학 이사회가 그 대학의 로스(Ross) 경제학 교수를 인종차별과 철도의 독점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고시켰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15년 존 듀이(John Dewey)와 그에 동조하는 교수들은 미국대학교수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AAUP)를 만들어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를 수호하고자 해왔다.¹⁾ 1940년 AAUP는 테뉴어제도를 “교수나 연구원은 일정한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는 영구적 및 지속적 고용을 보장받으며, 다만 정년, 또는 정당한 사유 및 재정적으로 긴급한 사정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고용이 종료된다”고 규정(박인우, 2008)하며 테뉴어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

1) 참고: <https://www.aaup.org/about/history-aaup>(2022. 10.18)

해왔다. 테뉴어제도가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종신교수직제도로 정착했고, 여러 나라에 확산되게 되면서 한국에도 도입되었으나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비정규교수 고용정책의 확대로 인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 한국에서 학문의 자유 수호 투쟁은 독재 정권과 냉전 이데올로기와의 대항으로 점철되었다. 해방 공간에서 지식인들의 자주, 민주, 통일의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각종의 활동, 1960년 4월혁명 이래로 한일회담반대 6.3 항쟁, 1970년대 반유신투쟁 때에 지식인들은 각종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1997). 1977년 해직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발표한 『민주교육선언』²⁾과 1978년 전남대 교수 11인과 성래운 교수가 발표한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을 들 수 있다. 그 무렵 한양대 리영희 교수가 쓴 『이상과 이성』과 『8억인의 대화』가 공안당국에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생겼다. 1979년의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사건 결과 아카데미의 교육간사 6인은 ‘불법 지하용공서클을 구성했다’는 혐의로 연행되어 불법 장기구금, 무자비한 고문을 겪고 반공법 위반혐의로 기소 당했다(서울대학교교수민주화운동50년사발간위원회, 1996;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1997).

1980년 전두환 신군부쿠데타 이래로도 계속되는 학문의 자유 탄압사건이 발생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학원 민주화와 사회개혁을 촉구하는 선구적 학자 87명을 무더기로 강제 해직시켰다(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2017). 그러한 탄압에 맞서 학술계에서는 상도연구실, 망원한국사연구실, 문학예술연구소, 산업사회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등을 자체의 힘으로 세워 학문적 실천을 하며 민주화를 앞당기며, 냉전이데올로기에 은폐된 사회·역사적 실체를 밝히고자 했다. 그런 과정에 국가이데올로기로서의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학문 탄압의 사건이 발생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1988년 서관모사건(일명 김동길사건), 1989년 이재화(실명 이승환) 사건, 1991년 서사연 사건, 1993년 한완상 사건. 일명 『한국전쟁과 한국사회의 변동』(풀빛, 1992) 사건, 1994년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1997년 이장희 사건, 1997년 박지동 사건(박지동 1996), 1998년 최장집 사건, 2000년대 강정구 만경대 필화사건 등이 있었다(김귀옥, 2000; 김귀옥, 2005).

이처럼 서구에서나 한국에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연구자의 더 많은 권력이나 방종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국가 권력, 자본 권력, 종교 권력 등에 의해 지식과 사상이 굴종되지 않고 진리를 연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부여된 권리이다. 그러다 보니 학문의 자유는 스스로 권력화되거나 방종할 것을 제한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스스로 자유를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들이 누리는 학문의 자유는 망실되고 만다.

3. 거약으로서의 연구부정행위

한국 지성 사회의 한 축에서 학문 탄압에 맞서 학문의 자유 수호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사이 다른 축에서는 학문이 권력과 자본, 개인의 이익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즉 현대 한국 학계에 ‘연구부정행위’가 조장되고 방조되고 있었다. 한국 학계나 사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학계에도 충격을 줬던 2005년 황우석 연구부정사건으로 인해 한국 학계에는 연구부정행위를 예방·억제·처벌할 수 있는 국가 수준에 법제도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2) 민주교육선언 참여 해직교수 13인은 ‘안보주의 정책과 고도경제성장 정책이 자유의 유보와 정의의 봉쇄라는 비극’을 빚어냈다고 지적하며 ‘학원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국가의 안보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주장을 천명했다(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1997).

않고 있음이 폭로되었다(『매일경제』 2005. 11. 28). 대학이나 학회 차원의 연구윤리 기구나 규범은 불비되어 있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인 경우도 많았다. 2006년 당시 과학기술부는 연구윤리와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침 제정작업을 착수하여 학술진흥법을 보완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과 역할을 부여했다(『연합뉴스』 2006. 1. 16).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2007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확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부당한 중복게재의 추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한국연구재단 2015)

즉 연구부정행위를 대별하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글쓴이는 해방 이후 한국 학계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를 돌아보면서 연구부정행위 사건이 단순히 연구자의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구조적 차원의 부정행위와 맞닿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늘 발표에서는 시론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부정적 경제이익의 공동체: 연구비 나눠먹기

해방 이후 대학을 포함한 한국의 학교, 특히 사립학교는 정경학 유착의 온상이 되어 있었다. 많은 사립학교들의 법인(소유주)이나 총장이 중심이 되어 여러 가지 명목의 연구비를 지급하면서 학교 공금 유용을 포함한 대학의 비리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시 말해 대학 소유주나 법인 등의 더 큰 경제적 비리를 위하여 교직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여 그들의 부정적 경제이익을 확보 및 확대하는 수단을 삼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1년 경희대의 사례이다.

경희대는 “76년 3월 1일부터 80년 2월 28일까지 교직원 1백10명에게 행정연구비로 1억9천9백50만원을 지불하면서 갑근세, 방위세 등 2천6백만원을 탈세”를 자행했다(『경향신문』 1981. 3. 23).

1977년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경향신문』 1977. 9. 2. 사설
 “수준이하의 교수논문”
 1일 문교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70년부터 75년까지 5년동안 23억5천8백50만원의 학술연구조성비를 받은 대학교수의 수가 모두 8천143명이나 되었으며 이들이 개인 또는 공동으로 연구 제출한 논문의 수만해도 4천805편이나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학술원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보면 35.3%에 해당되는 1천7백편의 논문들이 C급이하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도 4.1%에 해당되는 1백99편의 논문은 D급으로 논문의 체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고 한다. 확실히 뭔가 대학의 3대기능 중 하나인 연구분야에 어떤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노정시키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 같다. (……)
 솔직히 말해서 엄격한 의미에서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조성비를 지급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교수들의 생활보조비를 보태주는 일종의 시혜사업의 하나인 양, 흔히 나눠먹기 식의 인상을 주어왔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연구비라는 이름으로 시혜사업 같은 양상을 띤 나눠먹기식의 연구보조비 지급방식이 시정되어야만

수준이하 연구논문을 추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1970년대 대학의 연구비는 연구장려비 성격보다는 '생활보조비'와 같은 시혜사업으로 여겨지면서 그야말로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었다.

한편 연구비 지급에는 다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급은 이데올로기적 유인책으로도 사용되었다. 1986년 10월 18일 『동아일보』 1면 기사를 보자.

『동아일보』 1986. 10. 18. 1면
문교부는 현재 대학교양과정 필수과목인 국민윤리 강의와 대학별 이데올로기비판교육연구회가 중심이 돼 개설하고 있는 전국대학의 3백여개 이념강좌, 정치 경제 사회 철학 등 관련 과목 강의를 통한 세 갈래의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내실화하고 활발하게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문교부는 각 대학 중진교수들이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학술연구비의 우선지원 등 유인책을 강구키로 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쉽게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전문교수요원을 국비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980년대 교수 연구비는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적 대학생이나 그러한 사회운동에 대한 비판 또는 독재정권에 순응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나 방법을 개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또한 교수들이 독재정권에 대해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막음용으로도 연구비 등이 역할을 했다.

직접적으로 정부 방침에 순응시키기 위한 연구비 집행이 상대적으로 드물어 진 것은 1998년 민주정부 들어서면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프로젝트 사업이 제 역할을 하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00년대 이래로 최근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 약칭)과 2009년 통폐합된 한국연구재단이 발주한 다양한 연구프로젝트에 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 신진 박사들이 참여하면서 연구비 착복 및 유용 구조는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2002년 국내 이공계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의 81%가 자신이 속한 연구실에 연구비 유용을 포함한 회계비리가 있음을 응답했다(『연합뉴스』 2002. 10. 13). 서울대에서는 최근 자료에서 11년전에 있었던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 유용사건이 교육부가 2021년 수행한 서울대 종합감사에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뉴스시스』 2022. 9. 27).

과거 대학의 연구 정책은 독재 정부나 대학 당국이 국가 및 대학 질서와 부정부패구조에 순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강하여 교수, 연구자들로 하여금 학문의 자유 수호는커녕 제대로된 연구 수행과는 거리를 두도록 만드는 정책으로 전락하였다. 한마디로 정부나 대학의 회유성 연구 프로젝트 사업은 교수, 연구자들의 연구력 증진을 가져오기보다는 1977년 문교부의 지적처럼 학문 수준을 오히려 격하시키는 역할마저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척박한 연구 환경 속에서 한국학문의 일정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2000년대 민주정부가 학술진흥 정책을 일정 정도 수립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으나, 정치 민주화 이래로 그러한 연구비 비리는 줄었다거나 자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비와 연구프로젝트를 통한 대학과 연구사회의 관료주의화, 부패구조의 내재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이공계열 연구지원 정책에 비해 기울어진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 정책은 학문의 성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됨과 동시에 연구비를 포함한 연구 생태계의 왜곡을 가지고 오고 있다(김귀옥·주윤정·최윤·홍덕구, 2022).

2) 대학원 입시비리와 학위 금전수수설

부정적 경제이익 공동체는 수많은 대학입시비리는 특정 교수가 예외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있

졌지만, 대개는 학교 당국이나 교수들이 공모하여 불법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경향신문』 1995. 5. 7.). 과거에는 학부 대학생 입시비리가 많았다. 1990년대 지식기반사회가 형성되면서 대학원생에 대한 사회적, 산업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교육당국의 감사가 소홀한 편인 대학원, 특히 특수대학원, 예.체능계 대학원 등의 입시에 거액이 오가는 비리가 발각되지 않는다면, 대학에 음성적 비자금을 축적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한 과정에 대학 당국과 교수, 교수들간의 부정적인 경제이익 공동체가 조성되고, 학위 금전 매매와도 이어졌다.

<그림 1> 대학원 비리 사례 (경향신문 1995. 5. 7)



대학원에 부정하게 입학한 사람이 금전으로 학위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공부할 능력이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니지만, 한 마디로 제대로 공부하려고 입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 대개는 학위를 따기 위함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석,박사라는 문화자본을 과시하기 위해서이지, 연구를 하여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전혀 거리가 아닌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박사학위 금전 수수설은 1960년대에도 공공연하게 있었다. 1969년 국내 우수 인사들이 해외 유명 대학의 박사학위를 사들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박사학위 수수설이 사실로 밝혀졌다(『동아일보』 1969. 4. 14). 1990년대에 치과대학에서도 개원 치과의사를 포함한 여러 명이 교수들에게 박사학위를 금전으로 사들였다(『한겨레신문』 1998. 3. 27; 1996. 1. 23).

심지어 한국에는 학력공인을 받지 못한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 교수나 박사들이 적지 않다. 199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조사에 따르면 신학대를 제외하고 4년제 일반대학의 교수 중 최소 600~800여명으로 추산했다(『조선일보』 1994. 5. 9). 심지어 서강대 신문방송학 교수가 영산대학원장을 역임했던 김규는 1982년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되었으나, 그는 표절 부분을 수정하여 재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근거는 없다고 했다(『한겨레신문』 1999. 10. 14). 김규는 논문 표절에 이어 저서조차 표절 의혹을 받았으나, 정년 퇴직하여 서강대 명예교수로 남아 있다.³⁾

3) 서강대 명예교수 리스트 참고 바람.

2000년대 들어서도 가짜박사학위 사건이나 논문 표절시비, 대학원 입시부정 스캔들은 그치지 않았다. 음악계 지휘자의 가짜 학위의혹(『노컷뉴스』 2022. 10.18)이나 대학교수의 가짜 박사학위 논문 의혹(『오늘경제』 2021. 6.9), 조국 교수 사건으로 유명세(?)를 탄 전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가짜박사학위논문 사건, 어느 목사의 가짜 박사학위논문, 무속인의 가짜 박사학위, 방송 강사인 설민석의 가짜 석사학위 사건 등,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가짜 학위증은 개인이 천재적 실력으로 가짜 학위논문을 작성하거나 가짜 학위증을 만드는게 아니라면 대부분 돈으로 산 것일터. 그런데 2000년대 가짜 석.박사학위자들의 경우 표절이나 금전수수가 확실할 경우 학계나 일터에서 떠나게 되거나 징계조치가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었다. 한 예가 2012년 새누리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 불거진 박사학위논문 표절로 박사학위는 당연히 취소되었고, IOC위원직도 내려놔야 했던 문대성이다.

3) 학위거래 시장 형성: 학위논문 대필사건

2022년 9월 6일, 김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보고회에 따르면 표절의 범위와 수준에도 깜짝 놀라 어안이 병병할 지경이었다. 소위 김여사의 박사학위논문이라는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2008.2)에는 유명철학원과 점집 종합정보기 홈페이지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올린 보고서를 거래하는 ‘해피 캠퍼스(Happy Campus)’같은 사이트의 자료를 논문의 수 십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인용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다.

이번 국민검증단 보고회에서는 김여사의 박사학위논문과 3편의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표절’ 문제를 다뤘다. 보고회에서는 김여사의 이런 논문이 정말 자신이 쓴 논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언급 정도를 남겼다. 논문 대행 여부를 둘러싼 사실 관계는 수사기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 대행 관련한 사건은 그치지 않고 발생했다. 해외대학 박사학위 매입사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박사학위논문 매입사건, 가짜 박사 등의 사건이 등 그치지 않았다(『동아일보』 1968. 9.3; 1969. 4. 14; 1984. 7. 14).

가짜외국박사 학위증 관련 사건으로 유명했던 것이 가짜박사학위증 국제위조단 사건이다. 스리랑카인과 한국인 교수, 기업인, 목사가 포함된 국제위조단은 1989년부터 1992년 발각되기까지 홍콩, 일본, 필리핀, 한국에 알선책을 두고 스리랑카에서 한의사, 침구사, 약사, 목사, 불교 승려, 교사 등을 포함한 한국인 120여명에서 철학박사 학위증을 팔아 3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사건이다(『연합뉴스』 1992. 2.27). 2000년대 들어서도 많은 대학에서 가짜 박사가 나오고 있다.

1993년 10월 27일, 교육부 주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총학장회의에서 “최근 검찰수사 결과 8개대학 17개대학원에서 34명 논문대리작성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것이 드러났듯이 일부 야간전문대학원은 수업 및 학사관리 부실로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교수 1인당 논문지도인원의 과다와 논문지도소홀로 석박사학위의 질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동아일보』 1993. 10. 28)라고 보고되었다.

1993년에 밝혀진 실체는 ‘전국 지사를 갖춘 기업형 조직’, ‘박사 천만원-석사 3백만원’이라고 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1993년 당시에는 이미 가짜 학위논문 매매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데이터 뱅크사⁴⁾(대표 이규철), 대관자료개발원(원장 최석봉), 논문자료센터(대표 한재희), 미래사회과학연구소(소장 임원택) 등이 거론되었다.

https://www.sogang.ac.kr/intro/organization/c_prof_017.html (검색일: 2022. 10. 20)
 4) 2022년 현재 (주)데이터뱅크는 2019년에 설립되었다고 하니, 1993년의 데이터뱅크사와는 동명이사인으로 보임. (주)데이터뱅크 홈페이지: <https://www.theteams.kr/teams/8434>(검색일: 2022. 10. 20).

<그림2> 석·박사논문 대행사 건 (조선일보 1993. 8. 11)

1993. 08. 11 > 조선일보

의뢰 37명 임건 33명 학위취득 5명

5명 휴학 연구소장 데이타뱅크 대표

석·박사논문대작 7명구소

본원은 국내·외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700여명의 석학요원이 프리랜서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700여명의 석·박사 전문요원이 초·중등학교 재학생의 개인적 및 능력자를 설문지를 이용한 통계 분석 및 각종 실험평가 등을 통하여 학습진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국민학생에게는 원서까지 심역이 부진한 과목에 대한 문제해결·탐구능력·논리력서고능력 등을 배양하기 위한 학습자료를 집중개발하여, 목표로 설정한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cf. 대학입시는 학부모님의 자녀가 첫번째로 만나는, 인생의 중대한 길입니다.

정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대관자료개발원

TEL : 02) 825-4051 ~ 3, FAX : 02) 825-4935
(우편번호 : 156-052) 서울시 동북구 노량진 2동 261-4 (삼일빌딩 4층)

<그림3> 학위논문 대행사 광고 1 (매일경제 1993.6.4.)

1993. 07. 13 > 매일경제

EXPU내비

통역·번역·공급 안내

(외국 바이어 상담 및 의전에 관한 통역요원 적시 공급)

◆영어가 일어·독어·불어·중국어·러시아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아랍어(석·박사 학위취득 통역요원 300명 항상 대기)

本院은 국내·외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응시버 600명이, 논문주제별로 자료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 최고급 두뇌정보센터로서, 가치지향적·창의적 자료를 제공합니다.

석사·박사학위논문자료

모든 주제의 박사학위 논문자료에 관한 문의는
崔大寬 院長이 직접 상담하여 드립니다.

◆논문주제조사 및 자료제공 ◆외국관광에 관한 번역 및 자료수집
◆초인구성 및 목차정리 ◆통역자료(실문지) 수집·분석·검출 ◆PC정리(입력·수정·편집·교정) ◆월일만 특수대학원 재학생에게 신속·정확하게 제공 ◆각종 연설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자료공급

◆부산지사(총원) TEL : 743-4686, FAX : 743-4685
◆경남지사(총원) TEL : 66-3001, FAX : 66-7000
◆충남지사(대전) TEL : 630-1497, FAX : 630-1498
cf. 지사설치 대구·인천·광주·수원·울현
---예정지역--- 제주·제주(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요망)

대관문화사 부설 학위취득자료개발원
주소: 우편번호(156-052) 서울시 동북구 노량진 2동 261-4 (삼일빌딩 4층)
TEL : (02) 815-5006, 817-8447, 814-7924 FAX : 822-4158 (02간호의 환영)

<그림4> 학위논문 대행사 광고 2 (동아일보 1994. 5. 9)

1994. 05. 09 > 동아일보

본원은 국내외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600여명의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입니다. 유본원은 논문대행(대위) 및 통계(표절)·선거법위반업무는 전액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목의 주제에 관한 자료수집이 가능하고, 자료수집이 끝나면 석·박사 전문요원이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여 드립니다. (기간: 석사자료: 2~3개월, 석사자료: 30일)

석·박사학위자료 수집 개발

초·중등교사연구 논문자료

○6월 30일에 제출하는 재출판 논문자료 ○8월에 제출하는 학술연구 논문자료 ○7월 22일에 제출하는 연구보고서 자료 (본원에 제출된 논문작성 자료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도록 석·박사 전문요원이 컨설팅을 하여 드립니다. 전문 원예도·정상을 담당합니다.)

방송통신대학 학위 자료

○8월 29일에 제출하는 학위(졸업논문) 자료 (국내외 자료 300여종 논문자료 등을 복사하여 트리버 전문요원이 컨설팅을 합니다.)

지방 의회의원 선거정책 단체약탈 선거정책

○의정보고서에 관한 피진·인쇄·원고작성 ○정확한 명단수집, 개발 ○연설했(선문자·선거공보·소영인쇄물·선전보통) 원고작성

통계문서 번역

○실속·정확하게 남기를 준수하여 드립니다. (모든 국가언어번역가능)

지사 모집

○계정에 정지되어 수월·정확·장우·대관·대구·구미·부산·마산·전주·광주·제주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인정을 갖춘 분으로 서 보충금 납입이 가능하신 분을 모집합니다.
○귀비서류: 자기소개서·이력서·주민등록 등본
○이력서 부연 설명을 받습니다.
정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대관자료개발원
TEL : 825-4051 ~ 3, FAX : 825-4935

<그림5> 학위논문 대행사 광고 3 (조선일보 1994. 8. 11)

1994. 08. 11 > 조선일보

本院은 국·내외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700여명의 석학요원이 프리랜서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등생이 되기란 정말 어려운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전국의 학부모님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본원에서는 700여명의 석·박사 전문요원이 초·중등학교 재학생의 개인적 및 능력자를 설문지를 이용한 통계 분석 및 각종 실험평가 등을 통하여 학습진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국민학생에게는 원서까지 심역이 부진한 과목에 대한 문제해결·탐구능력·논리력서고능력 등을 배양하기 위한 학습자료를 집중개발하여, 목표로 설정한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cf. 대학입시는 학부모님의 자녀가 첫번째로 만나는, 인생의 중대한 길입니다.

정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대관자료개발원

TEL : 02) 825-4051 ~ 3, FAX : 02) 825-4935
(우편번호 : 156-052) 서울시 동북구 노량진 2동 261-4 (삼일빌딩 4층)

지사 모집

○부산 : (051) 462-3233 ○전남 : (062) 524-4193
○경남 : (0551) 94-2589 ○충남 : (042) 624-1987
○경북 : (0546) 455-1990 ○강원 : (0361) 57-4422

1993년 가짜학위논문 대행 사건에서 자주 거론된 회사가 '대관자료개발원'(원장 최석봉)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만 해도 명칭은 그림3에서 보듯 '대관문화사 부설 학위취득자료개발원'이었다. 학위 취득 목적으로 대놓고 밝혔고, 석, 박사 학위자 600명 프리랜서들이 논문 작성을 대행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그 개발원은 서울에 본사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 창원, 대전 등 3곳에 지사를 두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기업형조직을 갖췄다고 한다. 원장 최석봉 씨는 1993년 4월부터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경향신문 등 일간지에 '자료 수집, 정리, 번역, 통역을 위한 석·박사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재개했고, '옵서버'라는 명칭으로 198명의 석·박사학위논문 소지자를 대작자로 모집하기도 했다(『조선일보』 1993. 8. 11).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93년 8월 논문대행 사건 이후 회사 주소지는 그대로 둔 채, '대관자료개발원'으로 진화하였다. <그림4, 5>의 신문하단광고문에서 보듯, "본원은 논문대행, 표절, 및 선거법 위반 업무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소위 프리랜서 석학요원이라고 하는 정체 불명의 자들이 1993년 8월 사건 전에 비해 100여명이 늘어 700여명으로 증원되었다.

1994년까지 광고를 통해 대관자료개발원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이후 공식 자료로는 대관자료 개발원 관련 기사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현재 대관자료개발원 본관이 있던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2동의 상아빌딩 4층은 간판도 없이 남아 있다.

1996년 논문대리작성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5일 다른 사람이 써준 논문으로 ㅎ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임아무개(45. ○고 교사)씨와 같은 수법으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강아무래(41. 여 ○학교강사)씨, 이를 도와준 학원강사 김아무개(33)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두 사람의 논문은 한아무개씨가 운영하는 **논문자료센터** 소개로 김씨 등이 대신 써준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경향신문』 1996. 8. 16; 진한 글씨체는 글쓴이 주).

2000년대 들어서 대관자료개발원이나 논문자료센터와 같은 조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논문대행업체는 정말 사라진 것인지, 21세기 과학기술혁명과 인터넷의 발전 속에서 공진화되어 무엇이 되어 있을런지 알 수 없지만 사라졌다고 믿기 어려운 소문들이 계속 들린다. 그런 조직은 합법을 가장하고 표절과 같은 약탈적 고부가가치산업의 일환으로 역할을 하고 있거나, N번방 조직과 같이 SNS의 사각지대에 은닉하여 은밀하게 가짜논문대행조직과 같은 약탈적 역할을 하면서 서식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시장은 수요가 있고 공급이 존재하면 형성되기 마련이고, 학위가 신신분제사회에서 신분의 과시적 스펙의 역할을 하는 한, 노력하지 않은 채 학위를 취득하려는 탐욕스러운 수요자를 만족시킬 약탈적 공급자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4. 맺음말

학문의 자유가 학문과 연구로써 세상의 진실을 밝히는데 헌신하려 하는 행위라면, 연구부정행위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세상의 진실을 파묻고 거짓과 도둑질로 학문을 매도하고, 사회를 부패화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부정행위의 대표적 행위인 ‘표절’에 대한 유혹을 간혹 느낄 수 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데, 내가 공부하며 도출한 생각이나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선행 연구자가 이미 글로 표현한 것을 읽게 되었을 때, 굳이 인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다윈(C. Darwin)과 월리스(A. R. Wallace)의 연구 과정을 생각하며 이러한 유혹을 내려놓고, 선행 연구를 인용하는 것이 내 공부의 양과 폭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글을 읽을 때, 표절의 혐의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런데 표절의 유형이 너무도 다양하여 집필 행위 중에 표절행위가 있는지 아닌지 식별하기 어렵기도 하다. 그러나 연구자라면 반드시 ‘연구윤리’ 교육을 통하여 표절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알아야 한다. 연구부정행위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 예술계야 말로 연구윤리 교육이 중요함이 강조된다(김지인, 201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있는 이유는 그러한 표절 판단의 원칙(김시열, 2019)을 가지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뉴스를 보면 ‘연구 표절’이 유명한 사람들, 특히 정치인의 표상처럼 여겨진다. 장덕진교수도 지적했듯이 전문 연구자나 유명인만 표절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 학생들도 표절(『한겨레신문』 2013. 4. 14)을 해왔음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왜 연구부정행위가 문제인가? 개인의 수준에서 보면 노력하지 않은 채 남의 것으로 나의 이익을 얻는다면 도둑질이 아닌가? 노력하지 않은 채 남의 글을 베껴서 다른 동료들보다 나은 학점(성적)을 얻고, 다른 경쟁자를 떨어뜨리고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며, 석/박사라는 명예를 얻고 그러한 권위까지 얻는다면, 명백히 도둑질임에 분명하다.

연구부정행위는 도둑질임에 분명한 범죄행위이지만, 연구부정이 구조화되면 '부정행위'라는 감수성을 잃고 만다. 연구부정의 구조화는 개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불신의 사회를 만들고 만다. 성실과 노력의 가치, 창의력의 가치를 무력화시키고 권력과 부 앞에서 굴종하는 문화를 만연시킨다. 연구부정의 구조가 내재화되면 사회 정의, 평등, 분배라는 가치와 방법론을 무력화시키고, 연구에 기반한 학문이 형성될 여지를 허물어뜨리게 된다. 다시 말해 연구부정행위는 학문의 자유 자체를 훼손시키고 무시하는 범죄행위일 수밖에 없다.

표절을 포함한 연구부정행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러한 행위를 해서라도 자신의 원하는 권력과 부, 명예 등의 가치를 얻는 것을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되고, 연구부정행위를 도와주고, 그로 인해 고부가가치를 얻는 약탈적 산업(기업)이 존재하는 사회 구조를 직시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 없이는 눈 가리고 아웅한 채 그러한 부정행위는 언제 어디서든 재현될 것이다.

일제 강점기와 분단을 경유하면서 한국의 학문은 서구의 이론과 방법론을 이식하고 베끼며 유행시키고, 철 지나면 새로운 것들을 수입하는 구조가 정착화되었다. 특히 신자유주의 흐름이 한국 사회에 깊숙이 침윤되면서 한 개인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많은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가짜일지라도 박사학위라는 문화자본을 갖도록 욕망하게 만든다.

그러한 사이에 연구부정행위가 한국 학문과 한국 사회를 얼마나 퇴행시키고, 믿을 수 없는 생태계로 만들어 놓았는가를 2005년 황우석에게서 보았다. 그 사건이 준 충격으로 인해 2007년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시행되었다. 2008년에 간행된 김여사의 박사학위논문은 그 지침 하에 있기 때문에 연구윤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김여사의 논문 4편은 모두 2007년 2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시행된 이후 발표된 논문이므로 국민대 대학원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 표절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이수하지 않은 책임마저 져야 한다. 일반학회의 학술지의 경우 표절 상한선이 10%임을 고려할 때 김여사의 논문이 40%의 달하는 표절률은 학위논문이나 게재논문 취소는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한 범죄행위일 수밖에 없다. 또한 만일 해당 대학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기관은 연구윤리 교육을 하지도 않았고,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 학계나 사회에 서서히 연구부정을 '부정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권력과 부, '대박'의 꿈을 꾸는 짝퉁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권층이 아닌 많은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고 성실하고 행복하게 연구하고 강의하며 안정되게 살 수 있는 환경은 요원하기만 하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부. 200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정).
교육부. 201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일부개정).
김귀옥. 2000. 「한국전쟁과 레드 콤플렉스, 학문의 자유」. 『한국전쟁,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학술단체협의회.
김귀옥. 2005. 「'만경대필화사건'을 통해 본 강경구의 학문 세계와 실천」. 『경제와사회』 제66호: 287-346.

- 김귀옥·주윤정·최윤·홍덕구. 2022. 『새로운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과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시열. 2019.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양적 기준」. 『2019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 김지인. 2014 「디자인 대학원 작품논문의 표절방지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 방안-디자인 연구노트 활용을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4(4).
- 김홍식. 2007. 『세상의 모든 지식』. 파주: 서해문집.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1997. 『민교협 10년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2017. 『민교협 30년사 1987-2017』. 서울: 좋은기업 위드.
- 박인우. 2008.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미국 대학교육 Tenure제도에 대한 고찰”. 『인력개발연구』 Vol.10, No.1: 145-171.
- 박지동. 1996. 『진실 인식과 논술방법: 논문·논술대비 사고력과 표현력 향상의 길잡이』. 일월서각.
- 범학계 국민검증단. 2022.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대국민 보고회』(9월 6일 보도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대전: 한국연구재단.

『경향신문』, 『고대신문』, 『뉴시스』,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 『한겨레신문』